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국힘과 간담회

"국정조사 참여하라"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진상 밝혀 책임 물을 것"
유가족들 "예산안 · 국조 딜하고 협상하나 진상조사 제대로 안되면 밖으로 나갈 것"

국민의힘은 2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와 만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여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만희·박성민·조은희·김형동 의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도 상상이 안 되고 이해도 잘 안된다"며 "소중한 자녀와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은 오죽하겠나. 제가 아무리 슬퍼하고 비통해도 여러분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든 국정조사든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을 물은 사람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짤 것"이라며 "전체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해 두 번 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배우 고(故) 이지한씨 아버지인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딜을 하고 협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동네 이장회의는 아니지 않나. 저희 위해 일을 해주셔야 한다. 비참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국민들이 당신들을 대표해서 뽑았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새 정부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이 아파할 때 적극적으로 더 나서줄 것으로 믿었다. 근데 정부나 여당이나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주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표는 "진상이 제대로 안 밝혀지거나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방해하거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저희는 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그때는 철저하게 여당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故) 박가영씨 유가족은 "158개의 주검이 있는데 아무도 내 아이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저 또한 아이의 마지막을 모른다. 부모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국조특위 위원 사퇴 반려하겠다"며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책 모색

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최형열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 주관으로 지난 1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을 담당한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위한 후속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대법원처럼 도의회 예산편성권 근거 마련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지방예산의 1%내)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염영선 의원(정읍2) "주민의 조례 제안 시 법률 지식 자문을 위한 입법자문관 지원과 진정한 민의 대변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은(군산2)은 "특례시의 현재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있을 때 전라북도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최형열(전주5)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후속적 입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예산 1조6725억 확정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총 23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7건 등 일반안건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했으며, 주요 현안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익산시 본예산을 △일반회계 1조5,469억원, △기타특별회계 18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72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5,756억원 보다 969억원 증가한 1조 6,725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종오 의장은 "올 한해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여성들의 사회진출 도모', 오임선 의원이 '어양동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사업 추진'에 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국힘, 내년 성탄절 ·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제안

주호영 "정부도 긍정적"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당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내년 본예산 1조6235여억원 최종 승인

군산시의회가 2023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6,235여억원으로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수)는 19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6,347억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9,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6,235억여원을 승인했다.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다"며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전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美 F-22 전투기 ·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F-35A 등 한미 연합훈련 실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랩터가 4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했다.

또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 공군이 20일 미국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계기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측 F-22전투기와 우리측 F-35·F-15K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일대에서 시행됐다.

특히 일본 가데나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F-22 전투기는 이날 군산기지에 전개해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의 F-35A와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방침이다.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는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지상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다. F-22는 전체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01㎡에 불과해 곤충의 크기보다도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는 마하 2.5(음속의 2.5배) 이상을 낼 수 있을 만큼 빠르다.

또 작전반경도 2177㎞에 달하며, 1000파운드(453.6㎏)의 폭탄 2발도 장착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F-15 등 4세대 전투기와 벌인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번 미국의 전략폭격기(B-52H) 및 F-22 전투기의 전개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해 운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연합공군훈련은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상황에서 한미 최신예 전투기들이 전략자산 엄호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었다"며 "한미간의 상호운용성 향상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앞으로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시험은 추진력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벡토르 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18일에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뉴시스